

민중권력 쟁취하여 헬조선을 변혁하자!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https://www.k-rev.org>
문의: 010-4725-3677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입니다. 사회적 가치란 무엇입니까? 권력, 재산(돈), 명예 같은 것입니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모두가 수궁하도록 배분돼야 세상이 평화롭게 잘 굴러갈 것입니다.

여러 사회적 가치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핏 보면 권력보다 돈이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 제일 아닙니까?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권력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권력의 분배가 돈의 분배를 권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도 최대 관심사는 돈입니다. 말로만 민생, 민생하지 말고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졸업 후 재벌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승진하여 회사 임원이 되고 CEO가 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그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수많은 경쟁자가 있어서 전체의 10% 내지 1%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돈을 벌어서 안심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민중이 생산한 부의 대부분을 1%의 특권층이나 1~20%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8~90%의 노동자·민중이 분배받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이 그런 평등분배를 실현합니까? ‘시장’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그것을 실현합니다. 정치권력 가운데서도 가진 자들의 정치권력이 아니라 재산과 돈을 갖지 못한 노동자·민중들의 정치권력만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민중은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권력을 자기 손에 넣어야 합니다. 특권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정치권력까지 독차지해 온 불합리한 역사를 끝장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중권력 쟁취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자조적으로 불렀습니다. 수저계급론도 입에 올랐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학생이 자신이 금수저가 아닌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투신자살했습니다. 그는 은수저 계급인데도 말입니다. 사실 청년의 대부분

은 흙수저입니다. 이런 흙수저 청년들은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희망과 인간관계도 포기한 N포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저출산율 세계 신기록이 아닙니까? 그에 따른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처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이런 인구감소가 멈춰지겠습니까? 부의 불평등한 분배인 수저계급 구조를 타파해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노인들도 못지않게 삶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세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연금수령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51.2%인 817만 70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5.7%는 기초연금까지 합친 연금수령액이 월 50만원도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3년 전 추산한 최소 월 노후생계비(124만3000원)의 절반도 안 되는 월 50만원 미만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고령층이 70%를 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하는 노동자 빈곤율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은 전형적인 80 대 20 사회입니다. 20%의 중산층은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 80%는 사회적으로 실패자(loser)로 취급됩니다. 그 20% 중산층 가운데 약 10%만이 노동자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말입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서 이 기득권층에 들어가는 노동자는 12%정도이고 나머지 88%는 찬밥신세입니다. 이 비 기득권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기득권 노동자의 50%에 불과합니다. 청년빈곤뿐 아니라 이런 노인빈곤, 노동빈곤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 빈곤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부모와 이웃을 돌보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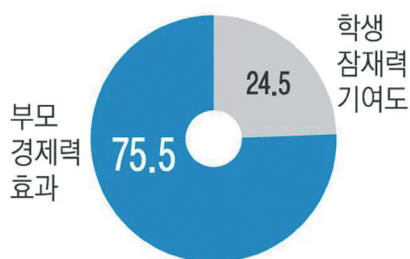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 우리 노동자·민중이 민중권력을 쟁취하여 그 권력의 힘으로 이 썩어빠진 헬조선 천민자본주의 파쇼체제를 변혁해야 합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는 보수양당독재 타도하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가계대출이 영끌·빚투 광풍이 최고조였던 2021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 멀어지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치솟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면서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 임금은 인상되지 않아서 실질임금은 정부 통계로도 2022년 0.2%, 2023년 0.4%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 정부통계상 실업자 수는 늘지 않았지만 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 실질적인 실업자가 급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1~7월 평균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45만3천명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물가 급등에다 실질임금 저하와 실업 증가로 민생이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자료: 한국은행

지난 8월 말 한국은행에서 전국의 의대나 서울 상위 대학 진학의 비결이 학생의 능력보다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75%를 차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고착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층 상승과 유지를 위한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 1인당 사교육비가 27%에 달합니다. 이런 데 어찌 결혼해서 자녀 둘을 키울 수 있습니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여야 보수양당은 정쟁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양당은 정쟁으로 죽일 듯 싸우면서도 독점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기꺼이 합작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자감세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수양당 권력분점과 독점을 깨뜨리지 않고는 민생파탄을 멈추게 할 수도 민생파탄의 원흉인 독점재벌을 해체할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넘어 보수양당 독재를 타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월 100만원 지급하라!

‘노인빈곤율·노인고용율·노인자살률 세계1위’, ‘폐지 줍는 노인 4만2천명’, ‘폐지 주워 월16만원 벌어’, 이것이 우리나라 노인의 현주소입니다. 노인의 태반

이 국민연금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다(10명 중 4명),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54만1천원’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게다가 보수양당은 국민연금 개혁한다며 납입금은 높이고 지급액은 깎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이 길가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부유층을 빼놓고 자녀에 의한 부양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노인의 빈곤과 소외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과 축적을 위해 노동능력이 있을 때는 죽도록 부려먹고 나이가 들어 노동능력이 저하하자 폐물 기계처럼 버리는 것이 어찌 사람 사는 도리입니까?

세계최고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을 없애려면 국민연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입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30만원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월 10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자들과 중산층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의원·병원 국영화·무상화 실시하라!

지난 2월 1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이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에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들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벌이는 저열한 집단이기주의 작태일 뿐입니다. 그러면 강경대응을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그들의 속셈은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확대입니다. 재벌들이 재단을 통해 대형 병원을 소유·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미 병원의 영리추구가 노골화되어 있고, 의료 양극화로 동네의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정원 증원은 이런 추세에 박차를 가하자는 것입니다.

이참에 의대정원을 늘이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의료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상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공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는 지금과 같은 치료중심이 아닌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예방중심의 의료, 공공 서비스 의료 가 되려면 모든 의료기관의 소유와 운영은 국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들은 국영의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면, 1948년에 무상의료를 헌법에 명시했지만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우파가 장기집권하면서 유명무실화되었다가 68혁명으로 노동자·민중이 펼쳐나서 좌·우 정치세력인 공산당과 기민당이 타협하여 국영의료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의료, 무상의료를 실현하려면 우리도 헌법을 개정해서 공공·무상의료를 국민의 권리로 못 박아야 합니다.



1977.6.28, 이탈리아 공산당 대표 베를링구에르(왼쪽)와 기민당 대표 모로(오른쪽)가 의료보험제도 개혁안 합의 후 악수 하는 모습.

전·월세 몰수하여 주택 재분배 실시하라!

주택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주택문제가 심각합니까? 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가 훌쩍 넘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그들이 가진 주택숫자만큼의 가구가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문제는 신규 주택 건설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주택 재분배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방 후 토지개혁을 하던 당시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했듯이, 거자유택의 원칙하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몰수해 재분배해야 합니다.

주택문제의 또 하나는 집값이 턱없이 비싼 것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것은 땅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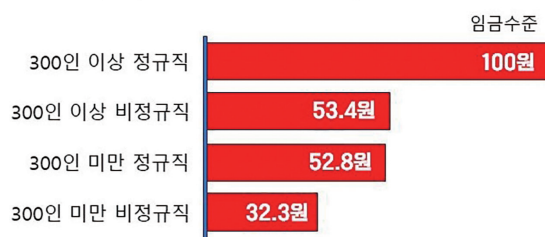
러므로 집값을 잡으려면 땅의 사유에 의한 지대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택지를 국유화해서 싼 값의 땅을 공급해야 싼값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래야 서민이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싱가포르의 주택 자가보유율이 90%가 넘는 주택 천국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택 자가소유'를 목표로 국가가 장기 계획을 세워 국토를 국유화해서 싼값의 주택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와 거래를 '주택개발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해 주택매매가 채테크와 투기의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주택 정책, 싱가포르도 하는데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독점재벌 해체하여 노동내부 불평등 타파하자!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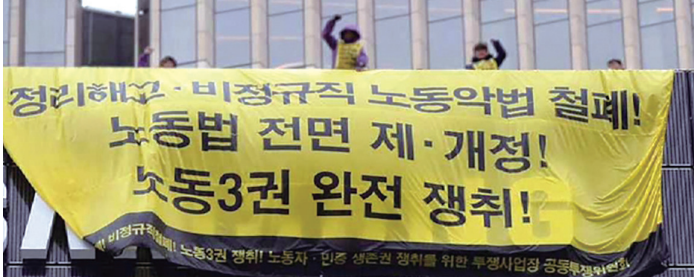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표에서 작성.
* 300인 이상 정규직임금을 100원이라 가정

우리나라 노동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53.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차별만 주목하고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의 52.8%에 불과하고 대기업 정규직 임금보다도 적습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또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약 60% 수준이고 대기업 정규직에 비하면 32.3%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표는 임금 불평등이 극심하고 그것의 많은 부분이 어떤 기업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벌 대기업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는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입시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실련이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총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1%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5대 독점재벌이 국민경제를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그동안 독점재벌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으로 종속시키고 생산의 전 과정을 통제하며 하청단가와 하청노동자 임금을 후려쳐

서 초과착취하고 수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그 밖의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괴물 불법기업집단인 독점재벌을 해체해야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노동내부 불평등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노동악법 철폐하여 모든 노동자 기본권 보장하자!



2017년 장기투쟁을 하던 노동자들이 노동악법 철폐를 전면에 내걸고 광화문 광장 옥외광고탑에서 고공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12.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20만 이상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노동자 수에 포함하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노조조직률은 사실상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게 과연 선진국입니까?

그러면 왜 노동조합 조직률은 이렇게 낮습니까?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할 노동법이 오히려 단결과 파업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동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수많은 지뢰밭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만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동자는 파업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으로 단결의 자유는 있습니까?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악법을 이용한 자본(원청을 포함)의 온갖 방해와 탄압으로 노조를 결성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악법은 일제하 치안경찰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악법은 또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치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악법 하에서는 노동자의 정치파업이 불법화되어 있어 정부가 나쁜 법과 정책을 시행해도 노동자는 이에 맞서 투쟁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수없이 정치파업이 합법적으로 벌어지는 데 말입니다. 이런 파쇼 노동악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시대

에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민주화했다고 하지만 보수당이 정치권력을 독차지하며 재벌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노동악법을 유지시켰고 일부는 더 개악했습니다.

민생파탄, 사회양극화 주범 독점재벌 해체하라!

세계적인 장기불황이 계속되자 국가는 경기를 부양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그 여파로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금리는 높아졌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경기도 침체하여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기업부채 규모는 2천734조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기업부채는 2018년부터 연평균 8.3% 수준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6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무려 10곳 중 4곳이라고 합니다. 이는 외부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계기업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영세 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가계 부채가 급증하여 2천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원흉이 누구입니까. 한국사회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독점재벌 아닙니까. 지난 7월 독점재벌의 으뜸인 삼성재벌에 맞서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폭로하며 파업을 하자 모든 언론이 앞다퉈 노조의 파업으로 삼성이 세계 반도체 패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이는 곧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트리는 짓이라며 일제히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재벌에게는 윤석열이 앞장서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26조원을 '반도체'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점재벌은 대한민국의 실세이고 주인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갈래 찌듯이 중소기업의 이윤을 짜내고, 중소자본은 노동자에게 그 희생을 전가합니다. 그리하여 자본과 노동 사이의 양극화뿐 아니라, 노동자 내에도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재벌이 사회양극화와 기층민중의 궁핍화에 주범이고 원흉입니다. 이런 독점재벌을 해체하지 않고는 민생파탄도, 사회양극화도, 경제위기기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